

종합·해설

輿 탈당과 23명 워크숍서 뭉 논의했다

“盧대통령 추진 개헌 반대키로”



열린우리당 탈당과 의원 23명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워크숍을 갖고 원내교섭단체 명칭을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 모임(통합신당모임)”으로 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탈당과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헌 반대 입장과 함께 한나라당 집권 지지 목표를 분명히 내세워 ‘비 노무현-반 한나라당’ 노선을 확실히 했다.

오는 12일 교섭단체로 등록하는 통합신당모임은 원내대표에 최용규, 정책위의장 이종걸, 대변인에 양형일 의원을 각각 결정했다. 전병헌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 최규식 의원은 홍보기획위원장이 됐다.

‘통합신당모임’ 교섭단체 오늘 등록

통합신당모임은 또, 중도개혁세력 대통합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통합 과정에서 일체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와 함께 해럴드 슈박에 없는 점을 감안해 재적 대의원의 수를 1만2천명에서 1만명선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도 당초 6천500명에서 5천명 선으로 내려갔다.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탈당한 지역을 사 고당원협의회로 처리하고, 당비를 내

지 않는 등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당원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해 모두 2천여명 가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전대가 평일에 열리는 데다 집단탈당 사태 후유증으로 대의원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재적 대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만 일각에선 지도부가 전대를 ‘반도막’으로 치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적 대의원을 줄이는 방식이 오히려 전대를 성사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바르지 않다는 것. 대진당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꼼수를 동원해 대의원 숫자를 줄여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쏟아내 ‘비노’의 정체성을 확연히 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과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노 대통령의) 큰 소리 한방이 모든 걸 날려 보낸다”고 말했다. 이강래 의원은 “결심이 설

‘非노무현-反한나라당’ 노선 설정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만 판단이 서면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창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개혁민주를 다 팔아먹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해 양 대변인은 “개방형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사정에서 주요 국가와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최종안을 보고 비준시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규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동산 분양권 공개는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관련법은 조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며 사립학교법은 이미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중도세력과 통합해 기득권 포기

검토하며 부동산 분양권 공개는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관련법은 조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며 사립학교법은 이미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한편, 통합신당모임은 당초 예정된 결의문 대신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성공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선진복지국가 건설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에 국민의 뜻 최우선 ▲햇볕 정책 계속·발전 ▲한나라당 집권 지지라는 목표를 담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輿 ‘全大 정족수 채우기’ 인간힘

재적 대의원수 2천여명 축소 일부선 적법성 제기할 수도

열린우리당이 14일로 예정된 전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당 내에선 전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 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상태다. 일단 당 지도부는 재적 대의원의 수를 1만2천명에서 1만명선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도 당초 6천500명에서 5천명 선으로 내려갔다.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탈당한 지역을 사 고당원협의회로 처리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등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당원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해 모두 2천여명 가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전대가 평일에 열리는 데다 집단탈당 사태 후유증으로 대의원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재적 대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만 일각에선 지도부가 전대를 ‘반도막’으로 치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적 대의원을 줄이는 방식이 오히려 전대를 성사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바르지 않다는 것. 대진당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꼼수를 동원해 대의원 숫자를 줄여

박수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전대를 못 열 상황이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반도막 전 대라도 치르지 못할 경우 추가 탈당 사태로 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재적 대의원을 줄이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당내 일부세력이 2·14 전 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대를 성사시킨 뒤에도 당내 일부세력들이 대의원 출석률 등의 문제를 놓고

전대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예전 전대의 경우 지도부 경선투표를 통해 출석 대의원의 수가 집계됐다”며 “그러나 2·14 전 대에선 경선투표가 없어 출석 대의원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출석률만 따져서 집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 대의원들이 전대 현장에 입장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86곳의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전대 출석 대의원의 숫자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밝히고 “도대체 제가 한나라당에 있는 것인지, 열린우리당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격정스러운 점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나라당에 표를 주어야 할 국민이 ‘잘은 몰라도, 뭘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당 안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mplaza.net)에 올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정치권 지각 변동... F1특별법에 ‘불똥’

전남도 비상대책 마련 나서

국회의원·관련 부처 방문 “F1 꼭 필요” 역설

‘F1(포플러 원) 국제자동차 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치권 지각변동이 불려온 ‘불똥’이 떨어져 전남도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이날 말 열릴 예정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F1특별법 상정을 목표로 이번 주 초까지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전력하기로 했다. 도는 개헌 논란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대거 탈당이 특별법 제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해 국회의원과

과 관련 부처를 집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우리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유선호 의원이 탈당한 데다 문광위원장인 전복 출신의 조배숙 의원이 당을 박차고 나가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간부진이 12~16일 특별법 처리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구식·정종복 의원 등을 만나 2월 상임위 상정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김종철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도

13~14일 국회와 각 정당에 들러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F1특별법은 현재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받고 있으며 지난 주 기획예산처·재정부·문광부·농림부 등 관계자들이 만나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오는 7월 F1경주장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이날 말 국회 문광위에 특별법안 상정한 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교도소 나서는 권노갑·강신성일씨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사면 조치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왼쪽)과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전의 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아들부터 병역면제”

고조흥 의원 입법 추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발의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11일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군복무 단축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남(男) 이상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빠른 시일 내에 총본가 자료를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음해·모략·흑색선전 당내서 진행”

이명박, 박근혜 ‘검증론’ 비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1일 “요즘 저를 향한 음해와 모략, 흑색선전이 당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당 안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mplaza.net)에 올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이 밝히고 “도대체 제가 한나라당에 있는 것인지, 열린우리당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격정스러운 점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나라당에 표를 주어야 할 국민이 ‘잘은 몰라도, 뭘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당 안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mplaza.net)에 올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 후보가 네거티브에 당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상대보다 한 술 더 떠서 우리 후보를 흡입하는 이음배반의 행동을 없애야 한다”면서 당내 대권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내놓은 ‘당내 검증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이 최근 박 전 대표 진영과 의견에서 자신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후보검증론’ 등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공식 입장을 직접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titled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apartment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The ad is organized into sections for '아파트' (Apartments),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Commercial/Office/Community Facilities), and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Single-Family Homes, Multi-Family Homes). It also includes a '매각물건' (Auctioned Property) table and a '참고사항' (Notes) section.